

한국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 성 훈*

A Critical Review on the Government-led Region-based Business-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 Policy in Korea

Jung, Sung-Hoo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산학연 주체 상호 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 산학연 협력은 '시스템적 측면'과 '인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이와 같은 현실의 대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 지원형 산학연 협력'과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향후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학연 협력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 창업'과 '기업 수명 늘리기'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주요어: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시스템과 사람, 지역 불균등 발전, 자영업 창업, 기업 수명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government-led region-based business-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s(BURIC) in Korea and to present main issues for solving and improving the current 'cul-de-sac' of these collaborations. The main problem of such collaborations is the wider divergence of opinions by actors who implement projects of the BURIC fund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ue to this problem, each region, mainly the non-Seoul metropolitan region, in Korea has problems of the system and people for BURIC. Within this context, main issues of the government-led and region-based BURIC is focused upon BURIC for the start-up of self-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companies' lifespan. Since 2000, experts and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business- (or company-) centered BURIC rather than University-focused one. This point of view should be improved or corrected. That is to say, policies of BURIC are in need of focusing upon the start-up for self-employment and the expansion of companies' lifespan.

Key Words: government-led region-based business-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s, system and people, uneven regional development, start-up for self-employment, companies' lifespan

1. 서론

참여정부 출범이후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 대학,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으며, 정부의 대학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강화는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다(정성훈, 2012). 이와 더불어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들도 많이 노정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연 협력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단기적 처방이 필요한 것도 있

지만, 장기적인 처방과 총체적 구조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이 존재한다.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은 이러한 경향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산학연 협력은 현재 구조화된 지역 간 불균등 발전을 완화하는 동력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학연 협력 주체들의 설정 문제, 기술개발 목표,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 대상의 적합성 등에서 아직까지 미흡한 점들도 많은 편이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향후 '지역'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역 산학연 협력의 막다른 골목을 해결

*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hjung@kangwon.ac.kr)

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된 몇 가지 쟁점들 간 논리적·실천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산학연 협력에서 필수요소인 기술개발의 범위를 이공계 분야만이 아닌 인문사회계 분야로 확대 통합해야 한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이 기술개발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된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그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기술개발의 수준에 있어서 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 분야의 창업 기술에도 지원 폭을 확대시켜야 한다. 아울러 창업 기업들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의 수명을 늘려 장수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활동도 필요하다. 지역 산학연 협력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지역불균등 발전의 완화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간 유기적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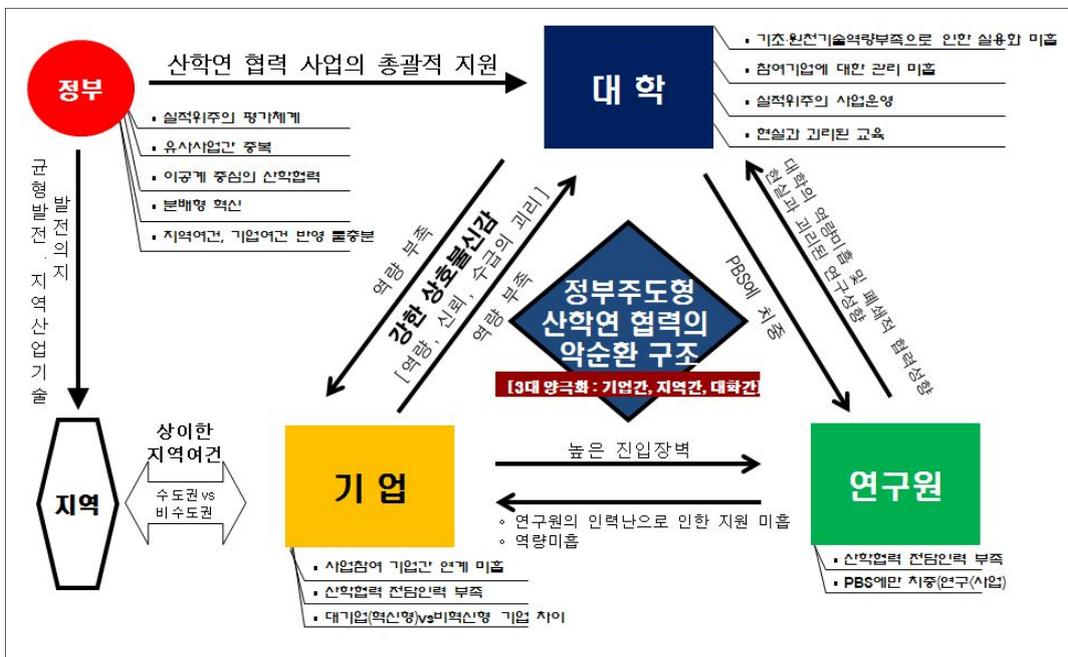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쟁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막다른

골목의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을 제시한다.

2.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막다른 골목

1990년대 중반이후 WTO 출범에 따라 세계적으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민간 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이에 기초하여 대학이 새로운 협력 주체로 부상하게 되었다(김갑수 외, 2000). 이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정부 지원의 공간적 범위를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¹⁾ 이후 지역 산학연 협력은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와 더불어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출범한 지 3년 후 산학연 협력 정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였고, 이를 통해



자료: 정성훈, 2006a, 2006b, 2012.

그림 1.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악순환 구조

서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에 대한 악순환 구조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정성훈, 2006a) (그림 1). 이와 같은 악순환 구조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적 문제인 대·중소 기업간, 수도권권과 비수도권 간, 대학 간 3대 양극화가 존재하였으며, 산학연 협력 주체인 대학, 기업, 연구원 간 상당한 시각차이도 있었다. 아울러 정부의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적 지원 체계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²⁾ 필자는 정부의 모든 산학연 협력 정책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있다는 것은 아니며,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악순환 구조가 극복되지 못한 채, 정부의 성과 진단이 끝난 2006년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고질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 정책의 부진요소들이 쉽게 보완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우리나라 지역 산학연 협력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다음 같이 요약된다.

지역 산학연 협력 정책과 그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주요 원인이 산학연 협력의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운영 주체인 사람의 문제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먼저, 시스템(체계)의 문제를 살펴보자. 정부는 이와 같은 혁신 하부구조 확충을 위해서 1998년 이후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 시기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별 테크노파크, 지역산업 기술 관련 특화센터, 기술혁신센터, 과학기술진흥기구 등 다양한 혁신시설들을 확충해 오고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도 정부는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 왔다. 참여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지역혁신 정책이 주로 16개 광역시도 단위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기존 16개 광역시도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에 초점을 두면서 광역시도 간 정책 통합을 통하여 광역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연속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5년을 회고해 본다면 우리나라 지역혁신체계에서 하부구조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부구조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부처별 기능 중복도 존재한다. 부처별 지역에 투자한 혁신 시설들은 각계약진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앙정부의 하향식 운영방식으로 인해서 지역적 차원에서 다양한 산학연 협력 활동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러한 점이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 시스템의 한계이다.

다음은 사람의 문제이다. 2015년 영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산학협력 정책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산학협력 정책의 핵심이 ‘사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Dowling, 2015). 필자는 영국의 산학협력 정책의 새로운 강조점인 ‘사람’ 중심의 산학협력에 대한 기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람’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산학연 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문제이다. 이는 혁신 운영의 인적자본의 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학연 협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조직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리더의 역량에 해당된다. 실제로 2009년 산학연 연계활동 현황 조사 보고서(정성훈,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산학연 협력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리더십’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우리나라 지역혁신 기관들의 연차별 경영 및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 보면,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특정 기관의 연차별 평가 결과의 순위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누가 좋은 리더인가를 확정지어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누가 부적격 리더였나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부적격 리더들의 성향을 정성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지역에 기관장이나 리더로 임명된 사람들이 산학연 전문가가 아닌 중앙이나 지방 정부에서 임명한 정치권 인사들인 경우이다. 이 경우 리더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산학연 협력 사업이 개인의 정치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리더가 가진 네트워크의 성격과 그 네트워

크에 함몰될 정치경제적 고착(lock-in)이다. 이러한 리더는 산학연 협력 사업을 자신의 국지적 네트워크만을 통해서 수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인 성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이 이면에는 리더 자신의 성취욕이나功名심이 놓여 있기도 한다.

둘째, 산학연 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문제이다. 흔히들 공동체의 신뢰에 기초하여 사람들 간 관계의 긴밀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이 자본은 사실 산학연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술혁신과정에서 필수 요소인 암묵지는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굳건한 토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의 사례들은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성숙도가 높게 나타난다. 일본의 이와테 대학교 중심의 산학연 협력사례(정성훈, 2012)를 살펴보면, 이와테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자본 확충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 산학연 협력의 모토는 ‘먹고, 마시고, 놀아라’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와테 모델의 정책적 활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사회자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이를 연차별 실적 평가의 성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행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포럼, 세미나, 교류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즉, 정책 지원에 의해서만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와테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대학과 기업들이 자발적인 연계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는 소폭의 지원만을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계의 파급효과는 자발적 연계를 통해 산학연 협력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구상되고, 이를 정부 지원을 통해서 수행할지, 민간 중심으로 수행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 확충’의 문제이다. 산학연 협력은 각 주체들이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전형적인 인력 투입의 활동이다. 산업별·기술별로 많은 전문인력(연구개발자, 네트워크 브로커, 전문 마케터 등)이 투입되어야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러한 전문인력 투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역의 혁신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자신의 전문 영역보다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산학연 협력 활동이 형식적인 과제 수행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3.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것 중 하나가 대학에서의 교육과 산업·기술 개발 현장 간 괴리이다. 이는 4년제 대학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한 대학과 기업 간, 대학과 연구원 간 시각 차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주장은 대학의 모든 교육이 기업 수요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교육이 친자본주의와 공급자 중심의 교육으로 한정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의 문제는 산학연 협력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교육-일자리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산학연 협력에 국한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지역불균등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이다. 인력 양성은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양성된 인력의 취업은 주로 수도권에 의존한다.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대경권(대구, 경북)과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하면, 졸업한 인력들의 지역 잔존율은 높지 않다(정성훈, 2015). 비수도권 지역에서 양성된 많은 인력들은 수도권에서 일자리 갖기를 희망하거나 자신이 졸업한 지역 내 기업이 부족하여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많다.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정부들은 기업들을 지역에 유치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치하려는 기업의 연관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이는 분공장 지역으로 전락하기 쉬워서 기업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창업 활동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창업한 기업이 보육단계를 벗어나 정상적인 레도에 진입하는 데 약 5~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책적인 지

원이 지속된다면 이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의 수명을 확대시킬 경우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림 1>에서 제시된 것처럼, 대학과 기업(특히,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시각 차, 즉 상호불신감을 줄여야 한다. <표 1>에 제시된 이와 같은 시각차이의 사례는 상호 불신감으로 인한 산학연 협력 체계의 파괴이거나 형식적 산학연 협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것이다(정성훈, 2006a).

마지막으로, 산학연 협력의 대상과 내용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은 주로 이공계에 국한되어 있어서 인문사회계의 산학연 협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공계와 인문사회계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산학연 협력은 매우 드물다. 영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이공계-인문사회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학연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정성훈, 2014). 1990년대 이후 출판된 유럽, 미국, 일본의 21세기 기술로드맵에는 ‘사회와 함께 하는 기술’과 ‘인간 중심의 기술’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Piore & Sable의 ‘기술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에 의해 개발되지만, 그 기술의 선택은 사회가 한다’라는 주장과 일치한다(Piore & Sable, 1984). 우리나라 이공계 중심의 산학연 협력 정책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표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산-학 간 시각차이

산	학
<p>• [기업-대학교수 간 기술개발역량 미스매치] -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지속성 단절</p>	
<p>○ 기술개발과정에서 교수들의 이론중심인 경향이 강하여 교수로부터 도움이나 결과물을 받는 내용은 미흡 - 심지어, 기술개발과제 전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업이 더 많은 내용과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음</p>	<p>○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낙후하여 교수들이 산학연협력사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 - 그러나, 대기업이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는 교수들의 역량이 미흡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 참여가 어려움</p>
<p>• [기업-대학교수 간 불신풍토] - 상호간 협력마인드가 미약하여 자체 이익만을 집착하는 형식적 협력 만연</p>	
<p>○ 대학교수들은 기술개발보다 실적 채우기만 급급하거나 교수의 자체 연구충족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 ○ 산-산협력이나 연-산협력이 산-학협력 보다 결과가 좋음 ○ 교수의 마인드 부족과 실제 사업비의 다른 용도 사용으로 협력을 해도 결과도출이 어려움. ○ 일부 참여기업들은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나 대학교수와의 친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 ○ 금형디자인은 당연히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업에서 대학에 요구한 일이므로, 이는 대학이 기업의 요구 맞춰서 연구를 해야하며, 기업이 일일이 참여하기 곤란함 ○ 산학연 연계 사업에 ‘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며, 회사 자금이 사업자금에서 10%정도는 들어가게 되더라도 과제 수행시 혼자 수행할 때보다는 돈이 1~2천만원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협력에 참여하는 것임</p>	<p>○ 매출액이 100억 넘는 기업이 대학에서 금형디자인까지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는 너무 무리한 부탁임 ○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기업의 연구원이 대학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당연하나, 기업에서는 과중한 업무로드를 언급하면서 인해 이에 비협조적</p>

자료: 정성훈, 2006a.

4.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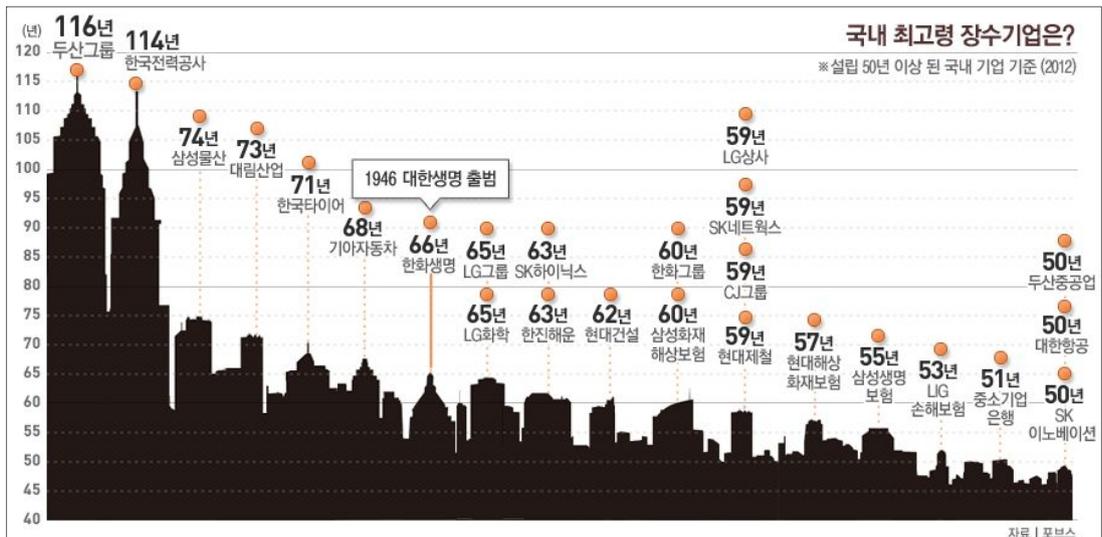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경제 지원형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 다.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들 중 하나는 기술 수준과 창업에 있다. 즉, 협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어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공보다는 실패의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기술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술창업 한지 5년 후 기업들이 생존하고 있는 비율은 전국 평균 약 30.9%로 낮은 편에 속한다(통계청, 2013). 이를 우수한 해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덴마크의 창업기업의 생존율인 약 80%(OECD, 2006)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술 창업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 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약 51%(한국벤처기업협회, 2014)를 점유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불균등성을 나타내고 있다(문승희, 2015). 이와 같은 상황은 기술수준이 낮은 자영업에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창업을 한다 해도 6곳 중 1곳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두지 않고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문가들은 과당경쟁 상태인 자영업 시장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자영업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했을 때 자영업의 생존율은 16.4%에 불과했다. 전체 폐업 중 음식점이 22.0%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음식점의 생존율은 6.8%에 그쳤다(국민일보, 2015.10.8).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형 창업인 자영업 창업의 생존율이 16.4%이며, 음식점 생존율은 약 6.8%이다. 실제로, 산학연 협력과 정부의 지원체계가 절실한 분야는 기술 창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창업 분야인데도 이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고,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의 필요성이다. 10년 전인 2005년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수명은 23.9년으로 매우 낮으며(남대일, 2005), 기업의 수명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도 2개 밖



자료: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3.1.16)

그림 2. 한국 장수기업 연령

에 없는 실정이다(그림 3). 일본의 경우, 창업 이래 1,000년 이상 존속하고 있는 장수기업이 7개사, 500년 이상은 32개사, 200년 이상은 3,146개사, 100년 이상은 약 5만개사가 존재한다(정후식, 2008). 이와 같은 장수기업이 많은 경우, 이는 경제의 지속적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산학연 협력 정책은 기업의 수명이 아닌 제품 개발과 판매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향후 정책 지원을 기업의 장수화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기업의 장수화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지역에 연고를 둔 지연산업, 전통산업, 풀뿌리산업 육성에서 산학연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산학연 협력 방법의 창출이 필요하다(정성훈, 2014). 예를 들면, 초기 시장진입형 기업, 시장확보형 기업 등으로 기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참여기업의 역량에 따른 산학연협력 단계 및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초기 시장진입형 기업은 마케팅 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바, 마케팅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안정형 기업은 차세대 기술개발에서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제2단계 성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분석을 사전·중간·사후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기술이전-지도-기업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정성훈, 2012). 현재 대학이 주관기관인 산학연 협력사업에서는 대학 내부에서 기업 지원 서비스의 모든 부분을 담당할 인력과 역량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것이 앞서 지적한 이공계중심형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관기관인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연구원들도 기업지원서비스의 세부 분야별 전문기관들과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지원 서비스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마케팅, 컨설팅 등을 산학연 협력 주체들에게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문

제점은 산학연 주체 간 나타나는 상호 시각적 차이가 크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산학연 협력의 시스템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에서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은 이와 같은 현실의 대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산학연 협력은 결국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 주체들 간 시너지를 제고시키는 ‘관계적 동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는 1990년대부터 서구에서 제시되어 온 ‘관계적 자본주의’의 중심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다 이론적으로 산학연 협력의 기반이 되는 클러스터, 지역혁신체계, 사회자본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정성훈, 2011). 그러므로 이 개념들이 지니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향후 산학연 협력의 이론적·실천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에서 네트워크는 산학연 주체들 간 연계체계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의 부가가치나 혁신성을 제고하는 원동력이 된다. 산학연 협력에서 중요시되는 사회자본의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인 조정, 협력, 신뢰, 규범의 호혜성의 정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으로, 네트워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성 요소들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 이때 사회자본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에서 구성 요소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즉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네트워크에서 높은 질적 수준을 지닌 사회자본이 형성되면, 이들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는 증가하며 교류 빈도 또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는 사회자본이라는 강한 유대감 속에서 성장하면서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을 위한 집합적 상승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의 주요 쟁점으로는 정책적 시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경제 지원형 산학연 협력’과 ‘기업의 장수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정책 전문가들은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보다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이와 같은 견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즉,

향후 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에서 기업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산학연 협력과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 창업’과 ‘기업 수명 늘리기’에 정책적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주

- 1) 이 시기 참여정부의 산학연 협력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을 위하여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에 보다 초점을 두었고, 이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야기 시켰다.
- 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정성훈(2006a, 2006b, 2012) 참조.

문헌

국민일보, 2015, 암울한 자영업, 십중팔구 ‘눈물’, 2015.10.8.

김갑수·서정혜·한상영, 2000, 산학연 공동협력연구 관련시책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대일, 2005, 2005년 한국의 장수 기업, LG 주간경제, 2005.5.11.

문승희, 2015, 강원도 기술창업 지원정책 개선 방안, 한국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정성훈, 2006a, 지역 산학연 협력 모델의 지방화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성훈, 2006b, 낙후지역 지역혁신체제 운영의 가능성과 한계: 강원도를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2), 65-74.

정성훈, 2009, 산학연 연계활동 현황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성훈, 2011, 살기 좋은 도시와 지역 만들기, 옥

한석·김창환·이의한·정성훈·배선학, 생활과 지리, 강원대학교 출판부.

정성훈, 2012, 정부 주도형 지역 산학연 협력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4), 65-74.

정성훈, 2014, 대학 특성화 방안에 대한 경제지리학적 고찰: 영국 Sussex대학교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3(2), 139-146.

정성훈, 2015, 메가 시티 서울의 기술상용화 네트워크 도시 형성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8(1), 47-53.

정후식, 2008, 일본기업의 장수요인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선닷컴, 2013,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3.1.16.

통계청, 2013, 기업생멸행정통계.

한국벤처기업협회, 2014,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Dowling, D. A., 2015, The Dowling Review of Business-University Research Collaboration, London.

Piore, M. & Sable, C.,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New York: Basic Books.

•교신 : 정성훈,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shjung@kangwon.ac.kr, 전화: 033-250-6691)

Correspondence : Sung-Hoon Ju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 Road, Chuncheon City, Gangwon Province, 200-701, The Republic of Korea(E-mail: shjung@kangwon.ac.kr, Tel: +82-33-250-6691)

(접수: 2015.11.01, 수정: 2015.11.15, 채택: 2015.11.18)